



정당의 수에 관한 새로운 일반이론의 모색

- 최대득표율이론과 검증

Toward A New General Theory of Political Party Systems: Plurality Theory and Test

저자 (Authors) 최정욱
Jungug Choi

출처 (Source) [한국정치학회보 39\(1\)](#), 2005.3, 145-159 (17 page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9\(1\)](#), 2005.3, 145-159 (1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정치학회](#)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0765665>

APA Style 최정욱 (2005). 정당의 수에 관한 새로운 일반이론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39(1), 145-159.

이용정보 (Accessed) 건국대학교
203.252.179.223
2015/10/19 18:2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정당의 수에 관한 새로운 일반이론의 모색: 최대득표율이론과 검증

최정욱
건국대학교

◆ 논문 요약 ◆

비교정치학에서 정당의 수에 관한 기존의 문헌에서 가장 중시된 변수들은 선거제도와 선거구의 크기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제도적인 변수들을 지양하는 새로운 일반이론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 글은 전국적 범위의 정당의 수가 아니라 선거의 기본 단위인 개별 선거구 수준의 정당의 수, 그리고 의석비율이 아니라 득표율을 가지고 계산한 정당의 수를 기본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러한 개별 선거구 단위의 선거정당의 수(the effective number of parties or candidates in votes at district level)를 설명하는데 기존의 제도주의적인 이론(예, 뒤베르제, 카스와 타야게페라 및 슈가르트의 모델)이 갖는 문제점을 우선 검토하고서, 정당의 수에 관한 시론적인 일반이론을 새롭게 제시한다. 이 이론은 선거제도나 선

거구의 크기보다는 최대득표자의 득표율이 정당의 수를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며, 또한 이 둘 간의 관계는 멱함수(power function)이다. 물론 이 새로운 이론은 기존 제도론적인 변수들의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러한 변수들은 2차적인 요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갖는 다양한 이론적 함의를 살펴본 다음에, 1988년부터 2004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와 1999년과 2004년 인도네시아 선거에 로고선형모델을 사용하여 새 이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검증하여본다.

주제어: 정당의 수, 선거제도, 최대득표율, 멱함수, 한국, 인도네시아

I. 서론

과연 정당의 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답변은 아마도 선거제도일 것이다. 뒤베르제를 시작으로 그 후 무수히 많은 연구자들이 선거제도와 정당의 수에 관한 연구를 하여왔다. 사회구조나 다른 비제도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군의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제도론적인 주장에 입각해 있다. 이것은 제도론적인 주장이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비제도론적인 주장에 비해서 이론적으로 보다 정교하기 때문이기도 하

* 이 논문의 초고들에 관해서 논평을 해주신 Donald K. Emmerson과 가상준 박사 그리고 3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다. 다시 말하면, 제도론적인 주장은 그것이 선거제도이든 선거구의 크기이든 제도적 변수를 정당의 수와 뚜렷하게 연결하는 가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비제도론적 주장은 비제도론적인 요인들이 중요하다든 수준이지 체계적으로 비제도적인 요인과 정당의 수를 연결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정당의 수(N)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 제도적인 요인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느냐하는 문제는 우리가 정당수를 두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달라진다. 정당의 수에는 두 가지 다른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의 비율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the effective number of parties in seats, N_s)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당이 획득한 표의 비율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the effective number of parties in votes, N_v)이 있다. 편의상 여기서 앞의 것을 원내정당수라고 하고 뒤의 것을 선거정당수라고 칭하고자 한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설명하는 요인도 달라진다. 그 이유는 일단 표를 얻고 나서 선거법이 정한 공식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게 되는데, 정당의 득표율 분포는 뒤베르제의 심리학적인 요인(psychological factor)이 암시하는 바와 달리 선거제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투표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반면, 투표율을 의석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순전히 제도적인 요인들, 다시 말하면 뒤베르제의 기계적인 요소(mechanical factor)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연구된 원내정당수와 선거제도 간의 관계보다는 선거정당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취합된 선거결과에 바탕을 둔 선거정당수가 아니라 개별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선거정당수를 설명하는 일반이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주요 관심사는 선거정당수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지만 선거제도와는 별개의 요인을 찾아내고 그것과 선거정당수와의 관계를 모색하는데 있다. 만약에 우리가 선거제도와는 별도로 얻은 요인을 가지고 선거정당수를 설명할 수 있다면 기존의 선거제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어느 정도 수정을 받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제 2절에서는 선거정당수 결정요인에 관해서 제도론자들이 내놓은 기존의 주장을 소선거구(또는 단순다수결제)의 영향을 중심으로 먼저 재검토한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이 이론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1988-2004)와 인도네시아 하원의원 선거(1999-2004)에 로그선형모델을 사용하여 각각 한 번 검증하여 본다. 끝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Ⅱ. 정당의 수에 관한 기존 이론 검토: 소선거구제의 효과를 중심으로

1. 선거제도와 정당의 수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선거정당의 수를 가장 먼저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뒤베르제의 업적이다. 뒤베르제(Duverger 1954)는 민주주의 정당체계 중 양당제와 다당제의 차이에 주목하고, 양당제가 나오는 것은 단순다수결 또는 소선거구제를 택한 결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론 그가

말하는 양당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호한 면이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론적으로 타당성을 가지려면, 그가 말하는 정당의 수는 선거의 기본 단위에서 발견된 선거 정당수를 의미해야 한다. 즉, 그 자신도 인정하듯이, 단순다수결의 효과가 정말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선거의 기본단위인 선거구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의 이론이 맞다면, 사실상 모든 선거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선거구에서 선거정당수가 2나 그의 근사값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특정 국가가 두 개의 주요 정당을 가지고 있고 그 국가가 단순다수결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고 하여서 우리는 뒤베르제의 법칙이 검증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개별 선거단위로 내려가면 논리적으로 볼 때, 특정 정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지역이 반이고 다른 정당이 절대 우세한 지역이 또 다른 반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도 국가적으로는 양당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양당제일지라도 개별 선거구 단위로 보면, 다당제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별 선거단위로 내려가서 뒤베르제의 법칙을 검증하여 볼 때, 양당제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발견된다. 즉, 엄밀하게 수치를 들어서 말하자면, 소선거구제 아래서도 선거정당의 수가 1.5가 되지 않거나 2.5가 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별 선거구에서 모두 양당제가 나타난다고 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양당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왜냐하면, 그렇기 위해서는 개별선거구에 존재하는 양당이 모든 선거구에서 동일한 양당이어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위선거구의 후보명부나 정당명부의 일치는 선거구 단위에 적용되는 선거제도와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정치엘리트들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느냐하는 문제와 직결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심각한 문제는 뒤베르제가 제시한 두 개의 인과과정 중 심리학적인 요소만 단순다수결의 선거구 단위에서 작동하는데, 실제로 심리학적 요소에 따라서 투표하는 투표자의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대체로 군소정당의 지지자의 경우 심리학적인 요인 때문에 군소정당을 포기하는 경우가 총 군소정당 지지자 중 절반을 넘는 경우가 드물다(Choi 2003). 이것은 선거정당수를 결정하는데 심리학적인 요소가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소선거구 단위에서 양당제가 관찰된다면 그것은 뒤베르제가 말하는 심리학적인 요인 또는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전략적 투표가 작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당한 투표자의 선호도가 양당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물론 여기서 선거제도가 전략적 투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양당에 대한 선호도조차 형성하였는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뒤베르제의 법칙과는 별개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2. 선거구의 크기와 정당의 수

뒤베르제의 법칙이 주로 단순다수결제(simple majority 또는 plurality rule)를 비례대표제와 대비하여 논의하는 반면에, 그 후 연구자들은 선거구의 크기(district magnitude, M)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다수결의 효과를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자 중 여기서는 콕스(Cox 1997)와 타아게

페라와 슈가르트(Taagepera and Shugart 1989)의 입장을 검토한다.

타아게페라와 슈가르트의 경우, 정당의 수는 $N=1.25(2+\log M)$ 로부터 ± 1 이내의 오차범위 안에 놓여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것을 일반화된 뒤베르제 규칙(Generalized Duverger's Rule)이라고 부른다(Taagepera and Shugart 1989, 145). 이것은 선거구 크기가 1인 경우, 즉 단순다수결제인 경우, N 은 1.5와 3.5사이에 놓여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 규칙은 기존의 뒤베르제의 법칙 보다는 포괄적이라서 훨씬 많은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규칙이 가져야하는 또 다른 특성, 즉, 정확도를 상당히 상실한 결과 얻은 것이다. 이 새 규칙은 정당의 수를 예측할 때, 최대 상하 1의 오차를 이론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선거구 크기가 1일 때 N 은 1.5에서 3.5 사이에 놓이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N 이 1.5에서 2.5사이에 놓여있는 경우에는 뒤베르제의 법칙과 충돌이 안 일어나지만, N 이 일단 3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넘게 되면, 이것은 뒤베르제의 법칙과 모순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뒤베르제의 법칙과 달리, '일반화된 뒤베르제 규칙'은 단순다수결 아래서 양당제가 나올 수도 있고 다당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큰 문제점은 '일반화된 뒤베르제 규칙'에서 말하는 N 이 전국적으로 취합한 정당의 득표율을 가지고 계산한 집합적 수치라는 점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가지고 한 국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구한 선거정당수의 평균값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우리의 주 관심사인 개별 선거구 단위에 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와는 달리, 각스가 내놓은 $M+1$ 규칙은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선거구 단위에서 일어나는 득표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선거구 단위의 선거정당수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스의 규칙은 선거정당수는 선거구 크기보다 1을 더한 수치보다 항상 작다고 본다(Cox 1997, 139). 다시 말하면, 정당의 수는 선거구 크기보다 1이상이 클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 규칙이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뒤베르제 법칙과 비교해보자면, 첫째, 앞의 뒤베르제 법칙이 엄밀한 의미에서 양당제만을 지향하는데 비해서, 각스의 규칙은 다만 선거구의 크기가 주어질 때 정당의 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상한선만을 설정할 뿐이다. 따라서 일당제가 단순다수결제 아래서 보인다고 하여도 그것은 더 이상 규칙위반은 아니다.

둘째로,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각스의 규칙은 최대 상한선만을 설정하기 때문에, 선거구의 크기가 1이든 2이든 3이든 심지어 100이든 일당제나 양당제가 모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는 그의 $M+1$ 규칙은 뒤베르제 법칙과 양립할 수 없다.

셋째로, 뒤베르제 법칙은 단순다수결에서 수학적 의미에서 1.5이상에서 2.5이하까지의 정당의 수만을 허용하는 반면에, 각스의 $M+1$ 규칙은 2이상의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엄격하게 각스의 규칙을 해석할 때, 정당의 수는 단순다수결에서 2.1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뒤베르제 법칙에서는 그 정도의 에누리는 허용이 된다.

마지막으로, 각스의 규칙이 갖는 최대 문제점은 선거구 크기가 작을 때, 말하자면 1일 때는 지나치게 정당의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2를 조금도 초과하지 못하는 반면, 선거구의 크기가 클 때는 허용 가능한 정당의 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있다. 그리하여, 선거구의 크기가 예를 들어 15인 경우, 그

의 규칙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정당의 수가 15를 넘어 16이나 17 등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당의 수가 15를 넘는 경우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이 규칙은 선거구의 크기가 클 때는 유명무실한 규칙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3. 선거제도와 사회구조의 상호작용

각스는 $M+1$ 규칙 말고도 또 다른 변형이론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정당의 수는 선거제도와 사회적 동질성의 상호작용 함수라는 것이다(Cox 1997, 142). 그에 따르면, 사회가 동질적이거나 단순다수결제와 같이 강력한 선거제도가 있을 때는 정당의 수가 적고, 사회가 이질적이고 그와 동시에 선거제도가 약한 것일 때 그리고 오로지 그럴 때만 정당의 수가 많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소선거구제와 같은 선거제도가 있을 때는 사회가 동질적이든 아니면 이질적이든 상관없이 정당의 수가 적다. 또한 사회가 동질적이면 선거제도가 어떤 종류이든 상관없이 정당의 수가 적다. 반대로 정당의 수가 많으려면 사회가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야하고 그와 동시에 단순다수결제와 같은 선거제도가 없어야한다.

기존의 제도론자들의 주장에 비해서 이것은 상당히 비제도적인 요소를 수용한 편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이질성만으로는 정당의 수가 증대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비제도론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부인하고 있다. 상호작용이론은 제도론자들의 핵심주장인 단순다수결의 선거제도가 정당의 수를 강력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반면에, 사회적 이질성은 정당의 수를 증대하는데 독자적인 역할을 못하며 선거제도의 도움이 없이는 정당의 수를 증대시키지 못한다고 본다.

하지만, 개별 선거구 단위의 정당의 수를 보면, 우리는 비록 동질적인 사회에서도 정당의 수가 선거구별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상호작용이론으로는 설명을 못한다. 물론, 실제로 개별 선거구별로 사회적 동질성의 차이가 나고 그로 인해서 정당의 수가 차이가 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에 선거제도가 단순다수결인 경우에는 이러한 반박도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선거제도가 단순다수결인 경우에 상호작용이론은 사회적 이질성의 정도와 상관없이 정당의 수가 항상 적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각스의 상호작용이론도 $M+1$ 의 규칙을 크게 벗어나는 완전히 별개의 이론은 아닌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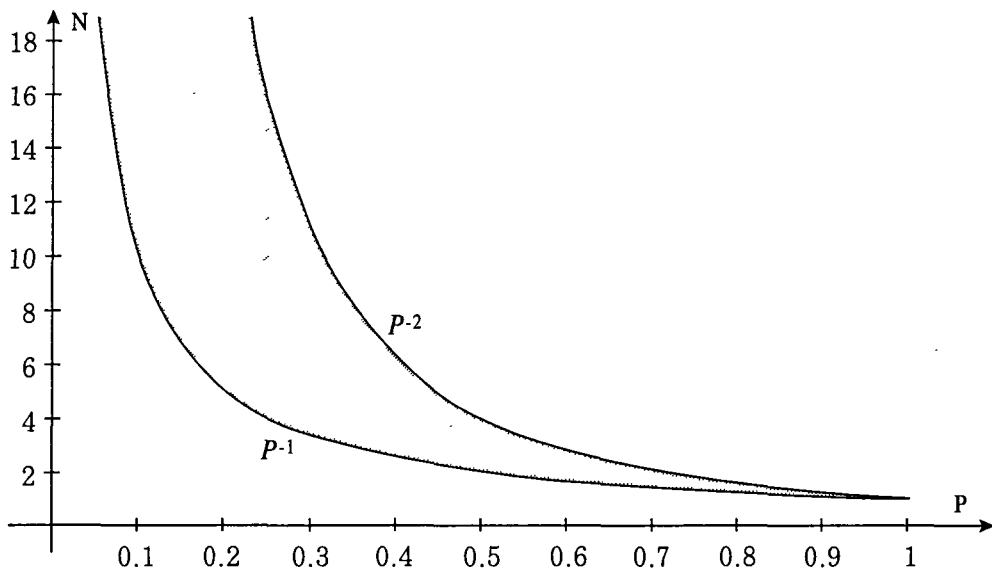
종합하여 보면, 정당의 수, 특히 단순다수결제 아래서의 정당의 수를 설명하는 기존의 다양한 제도론적인 주장들은 개별 선거구 단위의 선거정당수를 설명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모두 있다. 이제부터는 선거구 단위의 선거정당수를 설명하는 새로운 일반이론을 제시하고 이것이 갖는 이론적 함의를 보도록 한 다음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와 인도네시아 하원의원 선거에 각각 적용하여 통계적인 검증을 해보도록 할 것이다.

Ⅲ. 정당의 수에 관한 새로운 일반이론과 그것의 이론적 함의: 최대득표율 이론

앞 절에서 본바와 같이, 정당의 수를 결정하는 제도론적인 모형에서 결정적인 독립변수는 주로 선거제도가거나 아니면 선거구의 크기였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시론적인 일반모형은 최대 득표자의 득표율이 정당의 수를 결정하는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본다. 기본적인 생각은 최대득표자나 정당의 득표율이 선거구의 N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를 보다 공식화하여 말하면, N은 최대득표자의 득표율의 단순 멱함수(power function)이다. 즉, $N = P^\beta$. 이 멱함수에서 대문자 P는 특정 선거구에서 최대득표자의 득표율(plurality)을 나타내고, 그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또한 베타 기호는 계수(coefficient)를 나타낸다. $N = 1/\sum p_i^2$ (여기서 소문자 p는 각 개별 후보자나 정당의 득표율이고 그 총합은 1임)이기 때문에, N은 그림 1에서 사선을 친 영역이 보여 주고 있듯이, P-1함수와 P-2의 함수의 사이 어느 곳에 무작위로 놓일 수 있다. 그 이유는 $\sum p_i^2$ 는 항상 P²보다 크거나 같고 P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 베타(β)는 -2보다 크거나 같지만 -1보다 작거나 같아야한다.

멱함수의 계수는 계량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로그-로그 모델(log-log model) 또는 로그 선형 모델(log-linear model)을 사용하여 추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상수항(constant term)을 포함하여 $N = \beta_0 P^{\beta_1}$ 을 추정하는 모델로 사용한다(Gujarati 1995, 165-167; Johnston 1991, 65-66). 하지만 여기서는 상수항을 뺀 모형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론적으로 볼 때, 상수항을

〈그림 1〉 최대득표자의 득표율(P)과 정당의 수(N)의 논리적 분포도



참고: 〈그림 1〉에서 X축은 개별 선거구 단위의 최대득표자의 득표율(P)을 나타내며, Y축은 선거구 단위에서 득표율을 가지고 계산한 정당의 수(the effective number of parties or candidates in votes at district level, N)를 나타낸다.

포함할 경우, 후보가 단 한 명이 나와서 100% 득표를 할 때 P^{β} 이 언제나 1이 되어 N값은 상수항의 값에 좌우되는데, 상수항이 1보다 큰 값일 경우 N이 1을 넘게 되어 논리적으로 부적합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N을 P에 회귀할 때, 상수항이 없는 함수를 사용한다.

이제 이 최대득표율이론(plurality theory) 또는 간단히 P이론이 갖는 이론적 함의를 살펴보자. 첫째, 멱함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면, N은 최소한 논리적으로는 사선을 친 넓은 영역에 무작위로 어떤 곳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분포할 수 있다. 그리고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그 특정 득표율에 해당하는 N의 변동의 폭은 좁아진다. 즉, 최다득표자가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때는 N은 매우 작은 폭에서만 변동한다. 반면,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낮을 때에는 N은 최소와 최대값만 예측할 수 있을 뿐인데 그 때 최대 최소값의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N 값을 예측하기는 힘들다. 기존 제도론자들의 가설과 비교를 해보면, 비록 독립변수가 다르지만 N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화된 뒤베르제 규칙(GDR)'과 동일하다. GDR에서는 실제 N값이 상한값과 하한값을 넘을 수가 있지만 그림에서는 절대로 상한과 하한 바깥에 N이 놓일 수가 없다. 또한 M+1 규칙이 단순히 상한값을 설정하는 것과 달리 그림에서는 N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동시에 설정하게 된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그림 그 자체가 P이론은 아니다. N이 P의 멱함수라는 말은 단순히 N이 그림에서 표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영역 안에 존재한다는 당위론적인 주장을 넘어서 N이 특정한 베타 값을 갖는 멱함수가 그리는 선을 중심으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분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P이론이 또 한 가지 암시하는 바는 N의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결정요인은 사회적 이질성도 아니요 선거제도도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그것은 최다득표자가 다른 모든 후보자보다 얼마나 우세한 득표율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구조적이거나 제도적인 변수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런 변수들은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기계적으로 생각할 때 소선거구제 아래서 승리를 보장하는 득표율은 51%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승리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경우 이 득표율만큼의 표를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이상 얻는 것은 그한테는 자원의 낭비이고 그 이하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선거제도가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소선거구제에서 승리를 위해서 최저로 필요한 득표율은 51%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뀐다. 또한 후보자가 51% 득표를 원한다고 해서 모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변수들도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선거구의 크기가 작다거나 소선거구제라고 해서 반드시 N값이 작은 것은 아니다.

셋째로 P이론이 암시하는 바는 N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특정선거구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후보자가 나왔으며 다른 후보자들은 각기 얼마의 표를 얻었는지를 일일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최다득표자의 득표율만 알면 N값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다. 물론 후보자의 명목상 숫자나 다른 후보자의 득표율도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런 변수들도 N값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선거제도나 사회문제가 그렇듯이 그런 변수들은 다만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서 N의 값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뿐이다.

넷째로, 흔히 뒤베르제 법칙에서나 카스의 $M+1$ 규칙에서는 선거제도와 정당의 수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과원리(causality)로 전략적 투표를 강조하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득표율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반해 새로운 이론은 최다득표자나 정당의 득표율에 초점을 둔다. 전략적 투표에서는 군소후보를 지지하는 투표자들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가 승산이 없을 때 자신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차선의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후보자의 수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줄어든다고 한다. 이렇게 정당의 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전략적 투표 이론은 주로 군소정당의 지지자의 투표행태에 초점을 맞추지만, 새로운 이론은 최다득표자 중심 이론이다.

다섯째, 새로운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지만, 누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다른 변수들의 함수이다. 즉 P이론은 최다득표자와 정당의 수를 연결하는 이론이고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은 일반적인 투표이론(voting theory)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누가 가장 많은 표를 얻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투표이론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다양하다. 앞에서 언급한 전략적 투표도 있을 것이고, 대세편승효과(bandwagoning)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사회학적인 변수들, 지역구 도라든가 종족, 종교, 계급 같이 사회의 이질성을 측정하는 변수들도 끼어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추가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엘리트에 의한 입후보과정의 자체조정이다. 엘리트는 선거전이나 선거기간 동안 입후보자를 조정함으로써 대중의 선택의 범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입후보의 조정 실패로 인해서 후보가 난립하여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N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본다. 심지어 선거구의 크기가 1인 선거구에서 엘리트에 의한 조정의 실패로 두 명 이상이 동일한 정당의 깃발아래 입후보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특정후보를 투표자가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동안 기존 문헌과 달리, 정당의 수를 결정하는 이론과 투표이론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정당의 실질 수를 알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나 선거구의 크기가 아니라 투표자의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 특히 최다득표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P이론은 보여준다.

종합하여 보면, 선거제도를 가지고 정당의 수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소선거구제 아래의 개별선거구 단위의 정당의 수를 설명하려고 할 때 더욱 그러하다. 정당의 수는 선거제도의 함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의 직접적인 함수이고, 그 함수는 구체적으로 일차나 이차 방정식도 아니고 역함수도 아니고 멱함수의 모양을 띤다. 이것은 선거제도가 정당의 수를 설명하는데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직접적인 결정요인인 최대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이렇게 최다득표자의 득표율과 정당의 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전제로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것과는 달리 투표이론과 정당의 수에 관한 이론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정당의 수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직시하면, 기존의 제도주의 이론들은 선거제도나 선거구크기의 영향력을 과대하게 평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하면, 특정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가 얻은 득표율이 X%라고 할 때, 선거제도가 바로 이 득표율 획득에 얼마나 기여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선거제도가 정당의 수를 결정하는데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짐작을 할 수 있다.

IV. 로그선형모형을 통한 이론의 검증: 1988-2004 국회의원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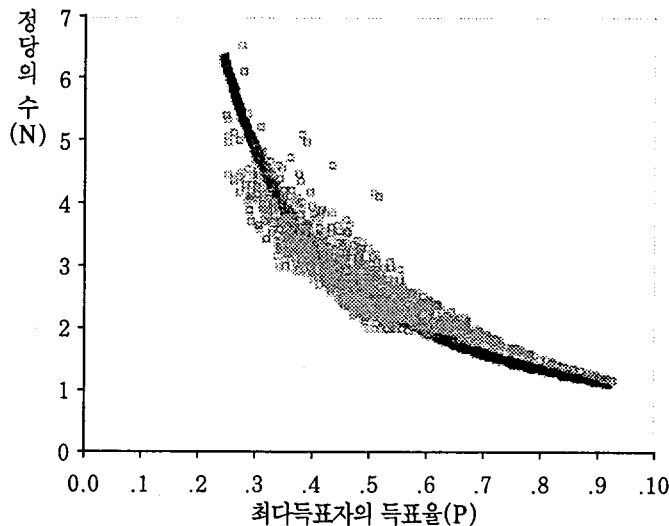
앞 절에서 논한 새로운 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국회의 원 선거결과를 로그선형모델에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부터 2004년 선거 까지 총 5번의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우리가 얻는 선거구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값은 모두 1,192개이다. 혼합선거제도 아래서 이루어진 2004년 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순다수결제도 아래서 치러진 선거결과이다. 2004년의 경우 우리는 데이터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기서 단순다수결제 즉 소선거구제 선거 결과만 포함하였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로그선형모델을 검증하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베타의 추정값은 -1.31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멱함수 $N = P^{-1.31}$ 을 정당의 수를 추정하는 함수로 얻게 된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이 된다.

<표1> 로그선형모델의 검증: 1988-2004 국회의원 선거

독립변수	계수	계수의 표준오차	유의수준
최대 득표율(P)	-1.31	0.005	0.00
관찰 수: 1,192개 R Square = 0.99 F = 80095.55	F의 유의수준 = 0.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그림 2> 로그선형모델의 그래프: 1988-2004년 국회의원 선거



참고: <그림 2>에서 네모상자는 모두 개별 관찰값을 나타낸다.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소선거구제를 취하고 있지만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의 수는 최대 6.56 개에서부터 최소 1.16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선거구제 아래서도 사실상의 일당제에서부터 파편화된(fragmented) 다당제에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로, 대체로 엄밀한 의미에서 양당제가 나오려면, 즉, N 값이 2가 되려면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약 59%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은 느슨하게 보아서 N 값이 1.5에서 2.5 사이에 있을 때를 양당제라고 보면,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최소 50%에서 최대 74% 사이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왜 수많은 선거구에서 양당제가 실현되지 않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소선거구제 아래서도 한 당이 약 60%정도의 표를 획득하는 것은 실제 선거에서 지배적인 정당이 아니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로, 로그선형모델의 또 다른 이름이 일정한 탄력성 모델(constant elasticity model)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멱함수의 특성은 어떠한 P 값에서 측정할지라도 N 의 P 에 대한 탄력성은 일정하다는 것이고 이 일정한 탄력성 값은 바로 다름 아닌 함수의 계수값(베타)이라는 점이다(Johnston 1991, 65).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풀어서 말하면, 우리의 경우 계수값이 -1.31인데 이것은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어떤 값이든 그 값에서 1% 증가할 때, 정당의 수는 1.31% 감소한다는 의미가 된다. 예를 들어,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0.4 즉 40%에 머물고 있을 때, 정당의 수는 3.32개가 된다. 여기서 만약에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에 1%의 증가가 일어난다면 득표율은 40.4%가 되고 이 경우 정당의 수는 1.31%가 감소하게 되어 3.28개가 된다. 최다득표율이론은 기존의 이론과 달리 선거제도와는 독립적인 변수인 최다득표자의 득표율로 정당의 수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독립변수의 변화율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V. 로그선형모델의 확장: 1999-2004 인도네시아 하원선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검증하여 보았다. 이 경우 사용한 데이터는 모두 단순다수결제 아래서 얻은 것이다. 다음 단계로 당연히 드는 의문은 로그선형모델을 비례대표제 아래서의 정당의 수를 설명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로그선형모델은 선거제도의 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비례대표제이든 단순다수결제이든 최다득표자 또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의 수가 직접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다득표자의 득표율 그 자체가 선거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비례대표제 아래서는 최다득표 정당의 득표율이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작을 수가 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순전히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여러 당이 비슷한 세력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택하였는지는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선거제도의 인과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이러한 논의를 별도로 하면,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은 단순다수결제에서보다 비례대표제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베타의 절대값이 단순다수결보다 비례대표제 아래서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선거제도보다 우선한다고 앞서 말한 주장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 비례대표제를 택하느냐 아니면 단순다수결제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이 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에 대해서 정당의 수가 갖는 탄력성이 변화한다는 말일 뿐이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 아래서의 로그선형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단위의 N 값을 충분히 많이 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개는 비례대표제 아래서의 단위 선거구는 전국을 하나로 하거나 상당히 물리적으로 넓은 지역이 된다. 이 결과 나라별 비례대표제 선거결과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물론 비례대표제를 택한 세계 모든 나라의 단위선거구에서의 선거결과를 취합하면 우리는 충분한 수의 관찰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작업은 거대한 프로젝트로 추후에 시도해 볼 가치가 있지만 여기서는 시도하지 않고 그 보다는 간단한 방법으로 검증을 한 번 해보고자 한다.

간단한 방법이란 다름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세계 4위의 인구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외환위기를 맞이하여 1999년 민주주의체제 수립을 위한 하원(Dewan Perwakilan Rakyat, DPR)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비례대표제를 사용하였다(KPU 1999b).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의미가 있는 일은 비례대표 선거의 기본 선거단위를 전국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도(provinsi) 단위로 적용한 것이다. 이 결과 나중에 독립한 동티모르를 빼면 26개의 독립된 선거구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은 비교가능한 26개의 비례대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셈이다. 또한 민주화이후 두 번째로 치른 2004년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더 많은 도를 신설하고 인구가 많은 도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선거구로 다시 나누어 총 69개의 독립 선거구를 가진 비례대표 선거를 실시하였다(KPU <http://www.kpu.go.id>). 이 두 번의 선거결과 얻은 개별 선거구 단위에서의 정당의 수와 최다득표정당의 득표율과의 관계를 로그선형모델을 가지고 검증하면 <표 2>와 같이 나온다. 이것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 <그림 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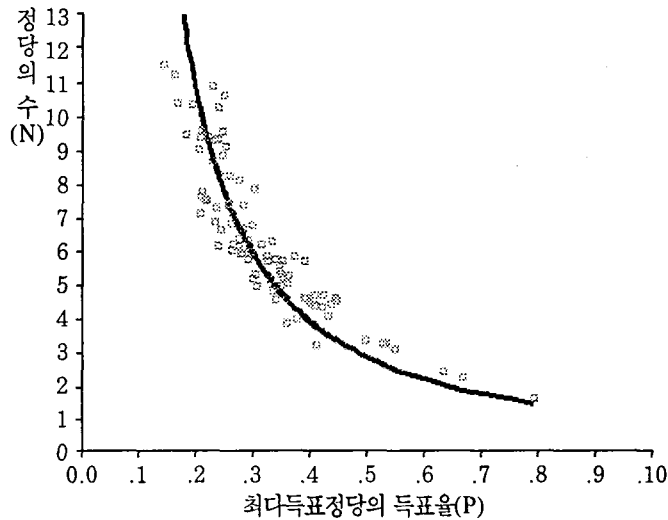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비례대표제 아래서도 최다득표정당의 득표율이 정당의 수와 멱함수 관계를 맺는다. 즉, 유의수준이 지극히 낮은 것을 보면, 우리의 모델과 독립변수 둘 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선거제도와 관계없이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정당의 수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소선거구제와의 차이점은 계수값이 비교적 크다는

<표 2> 로그선형모델의 검증: 1999-2004년 인도네시아 하원 선거

독립변수	계수(베타)	계수의 표준오차	유의수준
최대 득표율(P)	-1.46	0.015	0.00
관찰 수: 95개 R Square = 0.99 F = 9670.21	F의 유의수준 = 0.00		

자료: KPU 1999a; KPU 2000; KPU <http://www.kpu.go.id>.

〈그림 3〉 로그선형모델: 1999-2004년 인도네시아 하원선거



참고: 〈그림 3〉에서 네모상자는 모두 개별 관찰값을 나타낸다.

것이다. 소선거구제를 택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약 -1.31 정도의 계수값을 보여주었는데, 비례대표제를 택한 인도네시아 하원 선거의 경우 -1.46으로 차이가 난다. 다른 말로 하면, 비례대표제 아래서 정당의 수는 최대득표율에 대해서 보다 큰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Ⅶ. 결론

정당의 수에 관한 기존의 체계적인 연구문헌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독립변수는 제도적인 변수, 특히 선거제도와 선거구의 크기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최대득표자의 득표율이 정당의 수를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는 정당의 수와 최대득표율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히지 못했는데 이 글에서는 그 관계가 멱함수를 따른다고 보았다. 이렇게 정당의 수가 최대득표자의 득표율 함수라면, 우리는 더 이상 정당의 수가 선거제도나 선거구 크기의 함수라고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후보자나 정당이 최대득표율을 기록하게 된 것을 선거제도나 선거구의 크기로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 득표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투표이론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비제도적인 변수와 사회학적인 변수들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최대득표율이론 또는 P이론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정당의 수에 관한 연구와 투표이론을 별개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제도와 선거구의 크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은 제도론자들이 믿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선거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요인은 여전히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로그선형모델의 계수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당의 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비례대표제보다 단순다수결제일 때 로그선형모델이 갖는 계수의 절대값이 작다. 그 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동일할지라도 비례대표제 아래에서의 정당의 수가 전반적으로 보다 많아지게 된다.

제도주의 이론의 또 다른 변형인 카스의 상호작용이론은 비례대표제와 사회의 이질성이 결합했을 때만 오로지 그 때만 정당의 수가 많게 된다고 보는 반면에, P이론은 사회의 이질성이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결부해서만 정당의 수를 증대시킨다고 보지 않는다. 선거제도와 무관하게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은 모두 정당의 수에도 (비록 간접적이지만)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본다.

P이론은 이렇게 기존의 제도주의이론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비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전혀 새로운 사실을, 즉,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의 변화율에 따라서 정당의 수가 정확하게 어떠한 비율로 변하는지를 알려준다. 왜냐하면 로그선형모델에서 추정된 계수값은 다름 아니라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탄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로그선형모델에서의 탄력성은 어떠한 득표율에서든 항상 일정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 우리가 추정된 계수값은 어떠한 최대득표율 지점에서든 득표율이 1% 바뀔 때 정당의 수가 얼마만큼의 비율로 바뀌는지를 알려준다.

혹자는 로그선형모델이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림 1>에서 정당의 수가 뒤베르제 법칙이 예상하는 것처럼 너무 오른쪽에만 분포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왼쪽이나 중앙에 치우쳐 있다면 로그선형모델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로그선형모델은 기계론적인 결정론(deterministic model)이 아니다. P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의 수가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의 함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정당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른 후보자의 득표율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P이론이 맞다면 이것은 최다득표자가 몇 %의 표를 얻느냐에 따라서 다른 후보자들이 얻는 표의 비율이 상당히 제한받는다든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최다득표율이 40%라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나머지 표를 두고 몇 명의 후보자가 각기 몇 %를 나누어 가질지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조합이 가능하다. 하지만 P이론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무한대에 가까운 논리적 조합이 최다득표자의 득표율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정한 범주 이내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새로운 이론의 한 가지 단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예측의 문제이다. 우리는 계수인 베타값을 정확하게 추정할 때까지는 N의 값을 추정할 수 없다. 그런 경우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림 1>에서 보여주는 상한값과 하한값뿐이다. 베타값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는 N이 P의 멱함수라는 것만 알고 그 함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멱함수인지 모른다. 하지만, 계수 베타의 값이 선거 때마다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 선거에서 발견한 베타의 값을 미래 선거에서의 N값을 예측하기 위한 멱함수의 계수값으로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예측과 관련해서 문제는 남는다. 그렇게 계수값을 차용해서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특정 선거구에서 최다 예상득표자의 득표율의 추정치를 알기 전에는 그 선거구에서의 N값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특정 선거구에 대한 완벽한 정보와 확실한 투표이론을 가지고서만 예상득표율을 우

리는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때에만 우리는 N 값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제도론자들이 사용하는 기존의 N 값을 구하기 위한 공식보다도 훨씬 복잡하다. 예를 들어 뒤베르제 법칙의 경우 우리는 선거제도만 알면 바로 양당제인지 아니면 다당제가 나올 것인지 예측할 수가 있다. 비록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이것은 여기서 제시한 새로운 이론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계수값을 추정하고 최대득표자의 득표율을 투표이론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새로운 이론은 우리에게 보다 정확하게 정당의 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끝으로 앞으로 추가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한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사례만을 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검증하여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한 새로운 이론이 진정한 일반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민주국가들에서 일어난 선거의 선거구별 정당의 수를 가지고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은 매우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비례대표제와 단순다수결제 아래서의 계수값 차이가 전세계적인 비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거대한 연구프로젝트가 완결될 때까지는 이 글에서의 결론은 상당히 시론적인 성격을 띠는 사실을 미리 밝혀두고 싶다.

참고 문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 최정욱. 2005. "선거제도, 사회구조와 정당체계: 인도네시아 1955년과 1999년 총선거." 『동남아시아연구』 15(1): 107-132.
- Choi, Jungug. 2003. "Strategic Voting and the Effective Number of Presidential Candidates in New Democracies: The Case of South Kore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7(4), 191-208.
- Choi, Jungug. 2001. "Philippine Democracies Old and New: Elections, Term Limits, and Party Systems." *Asian Survey* 41(3), 488-501.
- Cox, Gary. 1997.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s Electoral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verger, Maurice. 1954. *Political Partie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Gujarati, Damodar N. 1995. *Basic Econometrics*, 3rd ed. New York: MacGraw-Hill, Inc.
- Johnston, J. 1991. *Econometric Methods*. Singapore: Macgraw-Hill Book Company.
- Kim, Jae-on and Mahn-geum Ohn. 1992. "A Theory of Minor-party Persistence: Election Rules, Social Cleavage, and the Number of Political Parties." *Social Forces* 70, 575-599.
- Komisi Pemilihan Umum(General Election Commission, KPU). 2000. *Pelilu Indonesia Dalam Angka dand Fakta: Tahun 1955-1999*(Indonesian Elections with Figures and Facts 1955-1999). Jakarta: KPU.
- Komisi Pemilihan Umum(General Election Commission, KPU). 1999a. "Hasil Penghitungan Kursi DPR-RI Pemilihan Umum Tahun 1999(Results of Allocation of DPR Seats in the 1999 General Election)." KPU documents.
- Komisi Pemilihan Umum(General Election Commission, KPU). 1999b. *Collection of Electoral Laws*. Jakarta.
- Komisi Pemilihan Umum(General Election Commission, KPU). <http://www.kpu.go.id>.
- Lijphart, Arend. 1984. *Democracies: Patterns of Majoritarian and Consensus Government in Twenty-one Countr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ae, Douglas. 1971.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lectoral Law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artori, Giovanni. 1976.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agepera, Rein and Matthew S. Shugart. 1989. *Seats and Votes: The Effects and Determinants of Electoral System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olitical theories espoused by Strauss, while others have criticized this with the logic of Strauss. However, liberalists who support American democracy have criticized both views from a liberalist point of view. The theories espoused by Strauss and the school of Strauss has become an indispensable discussion topic in the study of American system.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look into how the most important conservative factions look at their own system and history by investigating Strauss' and the Straussians' American theory of democracy. I hope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ould further reveal how political philosophy is applied to actual politics.

Electoral Competitiveness and the Effect of Incumbent Spending: A Spatial Model Analysis

Woojin Moon

In this paper, I argue that incumbent spending efficiency depends on the marginality of the votes; that is, safe incumbent spending is less efficient than marginal incumbent spending. I derive this explanation from a formal electoral competition model in which two candidates spend their resources to sway citizens' ideological voting decisions. The model suggests that marginal incumbent spending is more effective than safe incumbent spending since the former can easily win extra votes from centrists whereas the latter must sway extremist voters. Thus, as an incumbent's previous vote margin increases, the incumbent spending becomes less effective. The analysis of the Senate elections between 1974 and 2000 yields results that support this expectation.

Toward A New General Theory of Political Party Systems: Plurality Theory and Test

Jungug Choi

A great number of comparative studies have so far dealt with one of the most contentious theories in political science, that institutional variables such as electoral systems and the magnitude of district are the most crucial determinants of the number of political parties. This article aims to supercede this dominant theory of political party systems. It begins by discuss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problems in the existing institutionalist literature. Then, it presents a new general theory, focusing on the effective number of parties (or candidates) in votes at district level (N): the most crucial and direct determinant of N is neither electoral systems nor the magnitude of district but the largest party's vote share in the district (P), and N is a power function of P , i.e. $N = P^{-\beta}$. This study subsequently tests this log-linear model, using district-level election results from Korea's 1988-2004 legislative elections and Indonesia's 1999 and 2004 lower house elections. It concludes by summarizing key arguments and discussing their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The Failure of Political Party Coalition Movement in Jan. 1946 and Declin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s Political Strength.

Kwangkyu Nam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situation during the era of trusteeship in Korea in Jan. 1946, and concludes that declin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s the main cause behind the political chaos.

The research shows anti-trusteeship movement initiat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resulted in decadency of one's own political power. The result of the Provincial Government's unsophisticated option was the polarization of Korean politics throughout early liberation period.

Modern State Building and Liberalism in Korea: A Reconsideration of the Origin and the Prospect of Democratization

Jiyoung M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process of modern state building in Korea in terms of the origin of democratization and to give a new interpreta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rospects of democracy in Korea. If we define democratization in Korea not merely as a transitional process from authoritarian dictatorship to democracy, but as a formational process of democracy, the significance of establishment Republic of Korea in 1948 and liberalism as an ideology of democratization can be understood from a different angle. This study focuses on the